



요시미 순야(吉見俊哉), 『친미와 반미』(新米と反米—後日本の政治的無意識, 岩波書店, 2007).

역사

‘반미=아시아주의’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다

—
조관자

1 누가 ‘아메리카’를 욕망하는가?

문화사회학자인 요시미 순야의 『친미와 반미』는 ‘전후 일본의 정치적 무의식’이란 부제를 달고서 2007년 봄에 출간되었다. 한국어 번역서는 『왜 다시 친미나 반미나』라는 제목으로 2008년 여름에 벌써 나왔다. 옮긴이가 원제의 이분법적 구도를 깊이 헤아리자는 뜻으로 제목을 바꾼 듯싶다. 하지만 붙여난 한국어판 제목을 보니, ‘친미vs반미’가 ‘친일vs반일’ 못지않게 정치적 선정성과 민족주의 이념의 당파성을 띠고서 선명하게 갈무리되는 한반도의 현실이 떠오른다.

그러나 미국을 둘러싼 오늘의 세계 현실은 그렇게 선명하지도 투명하지도 않다. 추락하는 ‘제국’에도 날개는 있겠으나, 2008년 말부터 심각해진 글로벌 경제 위기는 네오콘의 위세와 초강대국 미국의 표상이 영원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문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포스트제국’을 대신할 질서가 ‘동아시아공동체’일는

* 지은이 | 조관자 일본 주부(中部)대학교 인문학부 준교수로서, 일본과 동아시아의 역사·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도쿄대학교 종합문화연구과 석사과정에서 에도시대의 국학자인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를 연구한 후, 근현대 일본과 한국의 문화 내셔널리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박사과정에서는 신채호와 이광수의 민족주의 담론에 대한 탈민족주의적, 폭력비판론적인 해석을 시도한 후, 식민지기 조선과 제국 일본의 지식 및 문화의 상호 작용 관계를 연구했다. 교육 현장에 서면서부터는, 1945년 이후 동아시아의 냉전 질서와 함께 구축되고 변화해 온 여러 갈래의 역사인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저서에 『植民地朝鮮/帝國日本の文化連環—ナショナリズムと反復する植民地主義』, 有志舎, 2007이 있다. 논문으로는 『共同的なる徳とカリスマの表象』, 『思想の身体—徳の巻』, 春秋社, 2007 등이 있다.

지, 국익과 당파적 이익의 '각축장'일는지, 아무도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러한 때에 '친미'와 '반미'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사태를 불러올 것인가? 두 용어를 둘러싼 의미와 표상들이 돌연 낮설고 의심스럽게 다가온다.

확실히 그렇다. '친미'와 '반미'의 경계는 글로벌(글로벌+로컬)한 단위에서 부단히 전변하고 교착해 왔다. 현실 정치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전략적 선택도, 이 책에서 제시한 '정치적 무의식'도, 결국 '제국' 질서와 연동하는 각국의 정세 변화 속에서 굴절해 온 것이며, 지금도 변화를 거듭하는 중이다. 따라서 '친미'와 '반미'를 언급하고 그 '정치적 무의식'을 밝히려면, 이들 용어에 역사적으로 부여된 이념적 상수에 얽매이지 말고, 급변하는 지정학적 변수를 주의 깊게 살펴야만 할 것이다.

실제로 전후 일본에서는 '친미-보수-우익' 대 '반미-진보-좌익'의 선긋기가 선명했던 역사가 있었으며, 이러한 표면적 인식은 한국사회에도 퍼져 있다. 보수 세력 안에도 '반미'가 존재했지만, 이들 '반미보수'가 적대시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계통을 잇는 '친미보수'였다. 그러나 일본의 벼블 경기가 무르익던 1989년, 소니 회장인 모리타 아키오(森田昭夫)와 소설가 출신의 우익 정치가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가 공동 집필한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 미국 의회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며 선풍적 반향을 일으키던 즈음, 그 지형은 확실히 흔들렸다. 그리고 1992년부터 일본 경기가 '잃어버린 10년'을 지나오면서 그 구도는 거의 해체되었다. 이제 9·11테러와 이라크전쟁, 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겪으면서, 일본인 그 누가 쇠퇴하는 '제국'을 동경하는 '친미'로 남아 있겠는가? 흑인 대통령의 탄생에 환호하고 미국의 저력을 인정하지만, 더 이상 아메리카를 욕망하는 일본인은 없다.

인터넷에 퍼지는 담론을 보면, 반미-우익(이시하라 신타로) 및 반미-좌익(일본공산당)의 여론이 모두 '아메리카의 폭력-군사기지'로부터 일본의 국민적

자립과 국가적 평등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현실 정치에서 미일동맹이나 대미협력을 지지하는 친미세력은 여전히 존재하다. 하지만 그들도 오래전부터 일본 문화가 ‘아메리카적인 것’에 물드는 현상을 비판해 왔으며, 반미세력이 주장하는 ‘독립’의 필연성을 긍정한다.

90년대 이래 일본사회에서는 이들 ‘반미’와 ‘친미’가 엇갈리고 아우러져, 일본의 국익을 옹호하고 네오내셔널리즘을 보완 또는 견제하고 있다. 이는 90년대 이후 일본 및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 및 경쟁의식이 동시에 확대된 현상과도 맞물려 있다.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포함한 일본의 동아시아 질서 구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오늘날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나누기 어렵다. 전후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는 진보진영에서 비롯되었으나, 2004년에 출범한 ‘동아시아공동체 평의회’(회장 :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의 활동에서 보듯이, 현재는 보수진영을 포함하여 정치, 경제, 관료, 학계가 모두 동아시아론을 선점하기 위한 활동을 ‘백가쟁명’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오래된 이항대립 구도로는 오늘날 일본에서 ‘헌법 개정’을 추동하고 포스트제국 질서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대중의 ‘정치적 무의식’을 분석해 낼 수조차 없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변화해 온 ‘친미’와 ‘반미’의 구도 및, 전후 일본사회의 ‘정치적 무의식’을 구성해 온 지정학적·사상사적 문제들은 오늘날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까? 동아시아에 구조화된 이항대립의 중층적이고 굴절적인 착종 관계 및 그 현재적 문제의 본질과 파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성찰’하면 좋을까? 요시미의 『친미와 반미』를 거울삼아 이러한 의문을 비추어 보기로 한다.

2 ‘ 친 미 ’ 와 ‘ 반 미 ’ 의 문 화 표 상

이 책은 일본이 수용한 ‘아메리카’를 18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장구한 시간대 위에 망라하고 재구성하였다. 도쿄디즈니랜드(1983년 개장)와 같은 미국

식 테마파크 및 소비문화의 일본적 현상을 연구해 온 저자는, 더 이상 미국을 타자로 인식하지 않는 일본사회의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다고 한다. 이러한 저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 책은 일본사회의 무의식 속에 내재된 ‘아메리카-일본적인 것’과의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계몽서이다.

원래 빨간 표지의 이와나미 신서(岩波新書)는 일반인과 대학생을 겨냥한 교양 교재로서 기획되기 때문에 문체의 평이성과 논증의 구체성이 요구된다. 마침 이 책이 출판될 무렵, 쇼와(昭和, 1925~1989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대학생이 되었다. 이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유행하는 소비사회와 글로벌리즘의 조류 속에서 성장해 왔다. ‘좌/우익’이란 용어조차 낯선 이들에게는, 근대성이 구축되면서 동아시아에 빚어진 구조적 갈등이나, 전쟁과 가난의 상흔을 보듬던 쇼와의 생활문화에 대한 기억이 없다.

이러한 독자의 세대 변화를 따라잡으며 이 책은 일본의 세상사(世相事)에 새겨진 복수의 미국 표상을 미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렇다고 구체적인 이미지만이 나열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은 동아시아의 ‘제국’ 지배 질서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친미’와 ‘반미’의 문화 표상이 내포하는 정치적 의미와 권력의 작용을 분석하는 문화지정학의 결정체로 평가할 수 있다.

제1장에서는 ‘아메리카라는 모더니티’의 일본적 수용으로서 ‘자유’의 성지와 ‘야만스런 적국’을 상징적으로 대치시킨다. 문명개화 시기 일본인에게 미국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번역을 통해 ‘자유’와 ‘독립’의 나라로 알려졌다. 머지않아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와 같은 기독교도가 미국의 인종주의와 배금주의에 실망하게 되나, 새로운 물결은 도덕적 환상과 환멸을 뛰어넘었다.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시기(1905~1920년대 중반)에는 카페, 댄스홀, 영화관, 유원지, 레스토랑 등이 늘어나는데, 미국발 모더니티는 도시 일상의 풍요로운 소비와 오락 속으로 활기차게 유입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만주국 건설로 미일관계가 험악해진 1930년대, ‘일본으로의 회귀’

열풍 속에 일본인들은 유럽과 미국에 근대의 책임성을 전가시켰다. 근대성을 타자의 문제로 내몬 채, 일본은 ‘아시아 해방’과 ‘근대의 초국’이라는 자폐적인 환상 속에 몰입해 갔다. 제1장의 말미에서 저자는 영미를 ‘야만스런 귀축’[鬼畜英米]이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적국의 모더니티를 갈망하고 모방했던 일본과, 사회과학적 시선으로 ‘야만스런 적국’을 연구하고 승전 이후를 준비했던 미국을 교차시킨다.

제2장에서는 미디어 분석을 통해 ‘점령군 아메리카’가 전후 민주주의 및 동아시아 반공기지를 구축해 온 방식을 재검증한다. 점령군은 사진보도와 검열제도 등을 통해 미국의 점령 사실을 감추고 천황제 내셔널리즘을 옹호하면서 동아시아에 ‘포스트제국’ 질서를 재편하였다. 저자는 전전부터 미국발 근대성이 천황제의 가부장적 구조를 유연하게 보완하는 장치로 기능했으며, 전후의 ‘천황제 민주주의’ 확립 과정에서도 그 정치적 의미의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음을 추론해 낸다.

점령군의 검열 문제와 헌법 개정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보수계열의 평론가인 에토 준(江藤淳)이 1979년 무렵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후 가토 노리히로(加藤典洋)가 『아메리카의 그림자』(アメリカの影, 1985년)로 살아가려는 일본인과 소비문화의 나약한 위선을 집요하게 제기하면서, 90년대 중반의 일본사회에서는 ‘역사주체’ 논쟁까지 벌어졌다. 가토는 전후의 ‘자유’와 ‘민주’가 원폭투하로 이루어진 무조건항복의 산물이며, 미일동맹 구도 속에서 아시아의 타자에 대한 책임이 망각돼 온 과정이라고 문제 삼았던 것이다.

하지만 에토는 자국의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빠트렸고, 가토는 야스쿠니 참배를 통한 일본인의 국민적 주체화를 서둘렀다. 요시미는 ‘반미’적인 ‘주체-일본인’을 각성시키며 국민적-국가적 공동성에 몰입하는 이들과는 태도를 달리 한다. 그는 반미의 표상이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보완하는 작용을 냉철하게 지적한다. 성폭력의 희생자이면서 ‘일본의 정조’를 훼손한 팡팡(양공주)의

표상은, 제국주의와 침략전쟁으로 그 ‘치녀성’을 상실한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직설적으로 회생시켜 주는 소재였다. 이들 표상 속에서 민주사회의 주춧돌이며 소비경제의 주체인 중산층 주부가 새롭게 부상하고, 남성적 자존심과 국민적 주체의식이 동시에 보상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폭력과 일탈, 풍요와 선망이 교차했던 지역으로서 미군기지가 재현된다. 팝송과 재즈, TV방송, 패션의 중심가 등, 50년대 이후 대중문화의 다양한 거점이 기지문화에서 파생하고 확산되었던 것이다. 또한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농민들과 기지경제에 의존하는 도시민들의 분열이 지역사(지방사) 속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기지문화의 이식과 반기지투쟁의 양상은 오키나와, 한국, 대만, 필리핀과 비교해 볼 연구 과제이다. 하라주쿠(原宿)와 록본기(六本木)는 한국의 이태원을 떠오르게 한다. 한편, 1955년 스나가와(砂川)의 기지반대 투쟁은 2005년 평택을 상기시킨다. 동아시아 반미운동에서의 지정학적 환경과 시간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이념 및 활동 주체와 전개 양상에서 연속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단란한 가정’을 중심으로 모던한 생활양식을 그려 내는 상업문화의 다양한 표상을 분석한다. 거기에는 미제(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선망하고 내면화하면서 동시에 ‘일본’을 주체화하는 논리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요시미는 반미운동이 격렬했던 시기에도 대중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적 경제문화 시스템은 꾸준히 이식되었음을 주목한다. 그 예로서 모던 스타일의 점령군 주택, 딘 영의 만화 『블론디』, 「아내는 요술쟁이」나 「말괄량이 루시」와 같은 미국산 홈드라마, 미국을 때려눕히는 ‘일본인’ 프로레슬러 역도산, 경제부흥을 주도한 가전회사의 광고와 주부의 주체화 등, 다채로운 현상이 거론된다.

일본의 ‘마이홈’ 문화는 50년대 말 텔레비전 보급 및 소비경제 성장과 더불어 활발해졌다. 이는 60년대 말부터 형성된 한국의 ‘마이홈’ 문화와 비교해 볼 만한 흥미로운 소재이다. 한국의 신문에서도 연재되었던 『블론디』의 일본판 홈

드라마 「사자에 상」(サザエさん)은 일본의 신문과 TV에서 모두 흥행했다. 반면 만화영화 제작이 여의치 않던 한국에서는 「아차부인 재치부인」과 같은 라디오 홈드라마가 TV방송국의 상업화가 활발해지던 1980년대 초반까지 인기를 누렸다. 또한 반미의 신체적 표상으로서 텔레비전 방송의 초창기를 장식했던 ‘한국인’ 역도산은,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 초창기에 일본인 이노키에게 역전승을 쟁취하며 시청자를 압도했던 김일의 퍼포먼스를 연상하게 만든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필자는, “갑신정변의 실패로 도미한 후 최초의 양의가 되어 귀국한 서재필이 미국을 어떻게 표상했을까?”하는 궁금증을 품게 되었다. 한국사회의 미국 수용은 해방 정국에서가 아니라, 개항 및 개화기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정』의 형식이 개화파의 딸 선형과 미국 유학을 떠나는 길에 삼랑진 수해 현장에서 열차가 지연되고 민족계몽으로 소설이 마감되듯이, 한반도에서의 미국 표상 및 그 연구는 ‘일본’ 또는 ‘민족 수난사’의 표상 속에 파묻혀 버린 느낌이다.

한반도에서의 미국 표상은 일본이란 타자와 남북의 분단 상황을 만나면서 더욱 중층적으로 균열·굴절되어 왔다. 그 문화지정학의 복잡한 실타래를 풀이할 연구가 더욱 절실하게 기다려진다. 요시미 자신이 한국어판 서문에서 밝혔듯이, 일본 속 미국 표상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고찰은 이렇게 동시대 한반도와 동아시아 문화사에 대한 비교연구를 자극하고 있다.

3 ‘ 친 미 / 반 미 ’ 의 교 착 · 교 란

일본의 패전 이후, 중국의 내전과 공산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의 반미 표상은 동아시아 공산주의 및 민족주의 운동과 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시아의 민중혁명과 민족통일을 저지하는 신식민주의 침략자이자 자본주의 퇴폐문화의 전수자로 선전되었고, 이러한 반미 표상은 ‘양키 고

홈'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이어졌다. 일본에서 미군기지의 철수는 아시아의 민족 해방운동을 원조하고 혁명적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과제였던 것이다. 오키나와의 반기지투쟁은 이러한 반미주의를 계승하면서도 군사기지의 위협으로부터 생활환경을 사수하려는 주민들의 평화운동으로서 지속되어 왔다.

한편 일본 본토의 반미투쟁은 무상하게 변해 왔다. 50년대의 반미 폭력투쟁과 60년과 70년의 대중적인 안보투쟁은 좌익진영의 해체 및 자멸과 더불어 대중의 기억 속에서 망각되어 왔다. 70년대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다수 일본인들에게 미국은 더 친밀한 우방으로 다가왔으며, 기지문화는 대중문화의 토대로 굳어졌다. 요시미가 그러하듯이 진보적 지식인들은 이러한 대중의 '친미'를 반공정책의 산물이나 풍요로운 소비에 대한 욕망 및 주체의 상실로서 설명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논리는 그 자체가 이미 반미 표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세계의 이민자와 노예의 후손들이 빚어내는 '아메리칸 모더니티'의 다양한 감수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세대의 기억 속에서 미국은 무엇으로 표상될 수 있을까? 대영제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하여 '자유'와 '민주'라는 이름으로 20세기 후반에 포스트제국의 지위를 누리 온 미국이다. 이 시기 미국이란 문화 상징은 오히려 글로벌화하는 자유주의 및 자본주의의 차별적인 실상 속에서 배태되는 역동적인 에너지, 다양한 인종의 신체 속으로 무차별적으로 파고드는 '공동 감각'이 아니었을까?

전후의 굶주림 속에서 맛보았던 초콜릿과 분유의 달콤함, 자국의 문화적 통제 구역 밖에서 확보하는 일탈과 거기서 느끼는 해방감, 통기타와 재즈의 음률 속에 밀려드는 블루 빛의 청신하면서도 애절한 감각, 저항적이면서도 퇴폐적인 록 음악의 외침……. 이런 다양한 감각들은 전통과 반항, 풍요한 소비와 반군대의 주체이념 등, 시대적 혼란 속에 던져진 긴장을 풀어내고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허용하는 매개체였으리라. 이는 굳이 일본과 한국, 대만의 모더니즘 문화만이 아니라, 소련과 유럽 등지에도 파고든 20세기 포스트제국의 광역적 문

화 상징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복수의 미국 표상을 중시하면서도 요시미는 간결하고 단호한 결론을 맺는다. 일본사회에 주류를 이루는 ‘친미’는,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가해 책임을 망각하고, 동아시아 ‘포스트제국’ 경영에 합류한 채 풍요를 욕망하는 대중의 정치적 무의식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와나미 문화인’이란 ‘영예로운’ 별칭을 소유했던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90년대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공유해 온 자기성찰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결국 이 책의 궁극적 의도는 동아시아의 냉전구조 속에서 미일동맹에 기초하여 경제대국의 지위를 누리 온 일본의 ‘소비사회형 아메리카니즘-내셔널리즘’ 및 ‘반미-민족 내셔널리즘’을 동시에 극복하자는 데 있다. 소비사회의 문제는 사회의 양극화 및 지구 자원, 생태계 환경과도 직결되는 과제이다. 경쟁과 탐욕의 논리에 기초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개혁 문제는 이미 ‘친미냐, 반미냐’의 정치적 태도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더구나 ‘소비사회형 아메리카니즘-내셔널리즘’의 성격이 단지 전후 일본에 특유한 ‘친미’의 ‘정치적 무의식’이라고 한정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요시미가 일본의 ‘친미’를 특별히 문제 삼는 이유는, 2003년 이후 세계적으로 반미감정이 고조되는 데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일본 사회의 친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데 있다. 전후 일본의 ‘정치적 무의식’은 미국 헤게모니가 지속적으로 관철되는 장이었다는 것이다. 요시미는 ‘친미’ 내셔널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모범을 베트남 반전 운동에 참가했던 쓰루미 요시유키(鶴見良行)의 행동과 글에서 찾는다.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 (일본어 약칭은 ‘베헤렌’) 발기인의 한 사람이었던 쓰루미는 미국의 군사기지에 숨어서 아시아에 대한 가해자성을 망각한 일본 국민으로서의 입장을 “단념”하노라 선언하고, 전후 일본이 자궁해 온 평화의 허위성을 폭로했다. 요시미는 일본의 국익과 결부된 동아시아 제국 질서를 부인하

며 아시아 민중 연대로 나아간 실천이야말로 ‘친미’와 내셔널리즘을 극복하는 대안이라고 제시한다. 미국의 군사력과 오락적 소비문화를 일상 속에 신체화한 ‘친미’가 동아시아 민중 연대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믿음인 것이다.

책을 끝까지 읽어 보면 요시미의 궁극적 지향점은 ‘친미’도 ‘반미’도 아닌 동아시아의 평화 공존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쉽게도 ‘반미’의 문제와 그 극복 논리는 언급하지 않았다. 요시미의 비판적 논리는 기본적으로 ‘반미’의 정보를 수용하고 있으며, 이 책 자체가 일종의 반미 표상으로 읽힐 수 있다. 예를 들면 제2장에서 천황 이미지는 ‘가짜 천황’을 포함하여 복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는 별다른 근거 제시도 없이, 자기현시욕이 강한 권위적인 야욕가로 그려져 있다. 이는 맥아더가 트루먼의 한국전쟁 억제정책을 거부하고, 미국의 대권에도 도전한 강경파였던 만큼, 미국 내외의 정적들이 유포해 온 표상과 일치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제국’ 질서의 변화를 위해서는 더욱 치밀한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일본인의 자성적인 ‘반미’ 시각으로는, ‘일본의 제국 지배’에서 벗어난 아시아 각국에서 더 강렬하게 대립하고 교착한 ‘반미’와 ‘친미’의 구조를 설명할 수 없다. 허물며 ‘반미 내셔널리즘’을 이용하여 팩스 아메리카나의 지위를 대신하는 또 다른 제국의 출현이나, 일국적 권력의 강화 및 동아시아의 긴장 구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친미’와 ‘반미’가 굴절해 온 역사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존 다워와 요시미는 미일의 정치적 ‘포용’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면서도, 45년부터 53년에 걸친 동아시아 냉전과 ‘포스트제국’화의 구체적 과정을 직시하지 않았다. 많은 진보적 지식인들이 미국의 패권 실현에 친미적 정치 세력이 야합하여 동아시아 제국 질서가 재편된 것으로 말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이 지역의 공산주의 혁명과 국민국가 건설을 둘러싸고 ‘보

수 우익'과 '진보 좌익'이 폭력적으로 충돌하면서 미국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유인한 결과란 사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요시미는 물론 동아시아의 역사주체가 복수로 갈라져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 이 책에서는 50년대 일본의 반미투쟁이 북한의 '조국통일·해방전쟁'에 연대하여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지지하는 일본공산당과 재일조선인, 그리고 농토를 지켜 내려는 기지 주변의 농민들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말한다. 또한 한국전쟁 휴전 이후 미소의 평화공존으로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되자, 폭력투쟁으로 대중적 지지를 잃은 일본공산당 내에서 '반미' 노선이 후퇴하고, '반기지' 생존투쟁만이 진행된 사실도 밝힌다. 그러나 일본공산당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확보할 뿐, 반미운동을 비롯한 각 주체가 동아시아 '제국' 질서 구축에 참여한 측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회피한다.

이 책은 나름대로 '친미'와 '반미'로 해석되는 복수의 표상들이 연쇄하고 충돌하는 다양한 모습을 추출함으로써 이항대립적 분석을 뛰어넘고자 시도했다. 그 중요한 사례의 하나로, 전전의 '동아협동체'론에 관여하다가 전후의 반미평화운동에 투신한 사회학자 시미즈 이쿠타로(清水幾太郎)가 등장한다. 시미즈는 50년대에 '기지로서의 일본=식민지로서의 일본'의 현실을 통절하게 비판하다가, 80년대에 일미동맹에 의한 대미종속 상태로부터의 독립과 핵무장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렇게 '반미'가 전변한 역사를 파헤치면서, 저자는 일본 속의 아메리카니즘을 내셔널리즘의 정치적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의식의 차원 위로 명징하게 복구해 냈다.

그러나 시미즈의 예에서 확인되듯이, 일본사회의 '정치적 무의식'이 '반미'가 아닌 '친미'를 내재화하고 있었다는 결론은 역시 너무 단순하다. 이는 고도성장 이후 급격히 쇠약해진 '반미'의 시각에서, '친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태도이다. 이러한 시각의 문제는, 70년대 중반부터 대중적 기반을 상실한 '반미'가 '친미'와는 서로 섞일 수 없는 고유한 이념적 정체성을 지니고 여전히 현실에서

길항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반미=진보'가 '반미=보수'로 반전하는 현실이나, 오늘날 '반미'와 '친미'가 아우러져 네오내셔널리즘을 강화하는 동아시아 각국의 현실은 더욱 모호하게 인식될 뿐이다.

현실 역사에서 '친미'와 '반미'는 쉽게 섞이고 동화되어 왔다. 이른바 '전후 55년 체제'가 지속하는 동안, '반미'는 '친미'와 더불어 일본의 국민적 주체성과 국익을 옹호해 왔다. 이는 일본만의 사정이 아니며, 동아시아 반미운동에 공통된 사실이다.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공간에서 살필 때, '친미'와 '반미'는 경쟁적인 정치세력으로 존재하면서도, 양자가 공조체제를 이루며 미국 헤게모니와 자국 내셔널리즘을 동시에 구축해 온 것이다. '친미'와 '반미'는 대립하는 기표(記表)이지만, 서로의 존재를 지탱해 주는 구조적 쌍생아로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의(記意)를 내포한다. 동아시아의 냉전적 폭력과 위선적 평화를 반성하고 극복하려 한다면, 같은 방향에서 대립하고 공존해 온 '친미'와 '반미' 모두의 역사를 성찰해야 한다.

'친밀한 적'들의 구조적 교착관계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전쟁 이후 미소의 평화공존 정책에 반대하며 약소민족의 '반미' 내셔널리즘을 지원해 온 중국은 어떠한가. 72년의 중국은 전쟁 중인 베트남과의 형제적 동맹관계를 파기하고 미국과 평평외교를 시작하였으며, 개혁개방 이래 중국 지도부는 '친미'로 선회하여 자본주의적 근대화로 방향을 틀어 왔다. 그러면서도 중국공산당의 이념적 내실은 여전히 '반미'이며, 일본과 한국의 학계에 널리 소개된 사회과학원의 한 지식인은 티베트 소요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미국 CIA의 음모론으로 일축한다.

냉전시대 일본의 정치계에서도 자민당과 사회당이 연합하여 친중 실리 외교를 기본 방침으로 삼아 왔다. 또한 일본정부는 북한과도 비공식적 교류를 지속하면서, 납치문제로 자국민의 반북감정이 폭발할 때까지 그 문제의 정치화 및 책임을 회피해 왔던 것이다. 일본인 납치, 탈북자 문제를 비롯하여 북한의 인권

정책을 비판해 온 주체는 오히려 ‘북송선’의 귀국사업에 적극 개입했던 과거의 친북파로서, 일본의 진보진영으로부터 ‘반북우파’로 고립당한 전향 세력이다. 동아시아의 미국 헤게모니는 이렇게 ‘반미/진보’와 ‘친미/보수’가 교란하고 내 파되는 역사 속에서 유지된 것이다.

4 ‘ 반 미 아 시 아 주 의 ’ 의 무 의 식

전후 일본의 진보적 사회 운동은 ‘아시아 해방’을 내세웠던 ‘반미 성전’의 역사 청산을 단지 군국주의와 우익의 죄과에 대한 성토로 대신하였다. 특히 ‘민주화’에 역행하는 점령군의 반공 조치에 저항하여 반미적 반제투쟁을 주도한 학생운동 조직과, 대중적 정치투쟁을 선도했던 공산당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반미주의의 군사투쟁에 합류하였다. 그들은 전전의 ‘반미 아시아주의’에 대한 성찰을 누락한 채, ‘전후 민주화’에서 ‘반미 폭력 투쟁’으로 선회하였다. ‘친미-보수-우익’ 계열에서도 국가방위와 살림살이를 떠맡은 ‘몸’은 미일동맹에 의지했지만, 그들이 일본의 국익과 자존을 시수하려는 ‘마음’조차 미국에 내준 건 아니었다.

탈냉전이 도래하기까지 일본의 좌우익에게 공통된 민족적 타자는 중국도 북한도 아니었다. ‘반제국주의 투쟁’과 ‘아시아 침략전쟁’을 구분하지 못한 ‘반미 성전’을 반성하면서도 민족적 자존을 찾으려는 그들의 ‘마음’은, ‘치녀성’을 상실한 일본의 민족주의를 대신하여, 미소의 패권에 저항하는 아시아 민족주의에 공명하고 의탁하였다. 전후에 아시아주의 담론을 개진한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는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진주만공격의 뉴스에 감격의 전율을 느끼며 아시아의 해방을 내다보았던 그는, 일본 근대화의 허상을 반성하고 주체의 재건을 비추는 거울로서 마오쩌둥의 중국혁명을 바라보았다. 아시아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마오쩌둥과 김일성을 표상하는 일본어 출판물은 70년대까지도 성황을 이루었다. 아시아 피압박 민족의 해방운동과 연대하려는 일본의 시민운동은 미국의 베트

남전쟁 패전 때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지식인 사회에서는 ‘반미’적 사색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시하라 신타로, 에토 준과 같은 반공주의자도 60년 안보투쟁에 나선 경력이 있다.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여 내셔널리즘에 경도되는 지식인의 주류는 ‘반미’의 정치적 태도를 견지했다. 시미즈와 같은 지식인의 ‘반미 평화론’과 ‘반미 내셔널리즘’은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양립했던 것이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와 같은 전후 민주주의와 평화운동을 대표하는 지식인도 미일동맹에 근거한 일본의 종속적 지위를 비판해 왔다.

전후 일본사회의 ‘정치적 무의식’은 ‘친미’보다 오히려 ‘반미’에 가까운 것이라고 해야 옳다. 일본의 국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민족적 자존’을 건드리는 타자는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대포를 내밀며 개항을 요구해 온 미국이자, 끝내는 원폭과 점령의 굴욕을 안겨 준 미국이었다. 그렇다고 이미 ‘내 안의 타자’인 미국을 무조건 도려낼 수 없기에, 좌우익을 불문하고 성실한 일본의 지식인은 아메리카의 타자화를 위해 꾸준히 분발한 것이다. 단지, 이미 일본을 파행과 굴욕으로 몰고 간 전력이 있는 ‘반미 내셔널리즘’은 전후에 정치적으로 신중하게 통제되어 왔다. 그 중심에는 합리적 보수와 진보 세력들의 ‘정치적 의식’이 작용했으며, 더 이상의 전쟁과 폭력을 원치 않는 국민 정서가 깔려 있었다.

현재 북한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식적 입장은 ‘친미’이지만, 각국의 민족감정을 경쟁적으로 추동하는 ‘정치적 무의식’은 ‘반미’ 성향을 갖는다. 게다가 ‘고전적’ 내셔널리스트들과 인터넷을 통해 확대되는 ‘새 세대’의 반미주의자들은 반미의 정당성을 시위할 때, 아시아의 독립과 세계평화를 옹호한다. 일본의 우월성을 신봉하는 이시하라 신타로도, ‘선전포고’라는 호전적 명칭의 인터넷 발신 창에서, 아시아의 발전과 세계경제를 염려하며 일본정부의 대미 추종 외교를 비판한다.

동아시아에서 ‘반미’는 미국의 군사적 지배로부터의 온전한 ‘평화’와 ‘독립’

을 주창하지만, 현실에서 그 주장이 이윤배반의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신중한 이해가 필요하다. ‘반미’는 결과적으로 미군의 철수와 각국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3국의 내셔널리즘이 경쟁하는 조건에서, 미국의 쇠퇴는 즉각적으로 일본의 핵무장을 재촉할 것이다. 반미진영에서는 일본의 군사화가 미국의 분담 요구나 세계 전략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지만, 미국의 의지를 초월하여 동아시아 내부의 역사적 갈등 구조 속에서 그 흐름은 필연적이다. 평화헌법도 결국 일본국민이 미국의 군사력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유지 가능했던 것이다.

가토 노리히로가 일본의 ‘비참함’에 대한 자각을 간곡하게 호소한 것처럼, 평화헌법은 애초에 원자폭탄의 위력 때문에 탄생하였으며, 전후 평화는 ‘폭력에 의 굴복’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비참하게 굴복한’ 일본이었기에 미국이란 방패 뒤에서 ‘부흥’을 이루고, 그 군사력을 완충제로 삼아 아시아 각국과의 평화적 외교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다. 미국의 쇠퇴는 일본이 아시아와 미국에 대한 대등한 입장에서 ‘자주 국방’을 행사하는 ‘보통 국가’로 회귀할 날을 재촉할 것이다. 그에 따라 중국과 한국의 ‘반일’ 민족주의는 더욱 고양될 것이고, 더불어 일본의 ‘보수 우익’의 활로도 확장될 것이다.

‘친미’의 ‘정치적 무의식’과 ‘반미 내셔널리즘’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려는 요시미의 필치에서 동아시아의 현실 정치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된 적은 없다. 마치 상담객의 무의식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타자의 명령을 퇴치하려는 유능한 심리술사처럼, 그저 전후 일본사회에 복수의 분신으로 복제된 ‘아메리카’의 명령을 용의주도하게 불러낼 뿐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일본의 일상사에 감춰진 미국의 발자취를 다양하게 확인하는 즐거움은 있었지만, ‘친미 보수’와 ‘반미 진보’의 지정학적 위치 추적을 방해하는 낯은 이념에 감전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제 전후 복구의 배고픔도 모르고, 그렇다고 고도성장의 거품도 만끽하지

못하는 일본의 청년 세대들은 더 이상 '아메리카'를 욕망하지 않는다. 그들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점령 하에 있는 '일본의 독립'을 주장하고, '반미 아시아주의'의 연장선에서 일본의 '대동아 해방전쟁'과 '식민지 근대화' 주장을 맹신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수의 일본인은 세계의 어느 국민보다도 풍요롭고 안전하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풍요로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전'을 욕망하고, 지구의 '평화'와 생태계의 '공생'을 희망하고 있으며, 그들이 실천 가능한 일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의 욕망과 미래의 희망 및 실천 가능성을 '반미'로 유인하고, 국민적 주체화의 논리로 포섭해서는 안 된다.

일본사회의 소비문화와 동아시아 포스트제국 질서의 문제를 '친미'로 표상하거나, 미국이란 거대 주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반성적으로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방법들은 '근대=서구 문화'의 극복을 결의하고 '영미귀족'과의 전쟁을 불사한 전전 일본의 '낭만적 자아' 및 전후 동아시아 공산주의 운동의 '민족 주체'를 불러들일 가능성이 높다. 서평을 정리하면서, 이제 '친일 친미'도 '반일 반미'도 아닌, 생활 문화와 국제 환경을 개선하는 내실 있는 언어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든다. 동아시아의 평화 공존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우선 국익과 당파성에 충실한 언어 표상, 그리고 '반미 아시아주의' 무의식을 명징하게 투시할 필요가 있다.